

'22. 02. 10. (목) 11:20

한 국 프 레 스 센 터  
기 자 회 견 장

---

-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건의안 -  
**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**

---

**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**

##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 건의[요약]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#### ○ 「경찰법」 개정(21. 1. 1.), 자치경찰제 전면시행(21. 7. 1.)

- 국가경찰은 유지 한 채(일원화), 생활안전, 여성·청소년, 교통 등 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나,

- “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”하는 現 일원화 체제로는 지역특성과 치안수요에 맞는 창의적·자율적 경찰서비스 전개에 한계가 있어  
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위원회의 기능 실질화 ③제도 이원화를 건의

### □ 주요내용

#### ①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

- 「지방자치법」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 근거 규정 명시

####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

#### ○ (인사)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권 실질화

- 자치경찰 승진 T/O 별도 확보 및 보통승진심사·징계위원회 구성·운영
- 지구대·파출소 자치경찰부 이관(現 112종합상황실 소속) 및 임용권 대상 포함
- 시·도경찰청 자치경찰부 조직·전출입·사무조정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
- 자치경찰부장 임명 시 위원회에 협의(추천권) 부여

#### ○ (재정)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,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및 세외수입 이관

- (자치경찰교부세) 주세(연간 약 3조원)의 약 5~10%를 세입으로 하는 방안 검토
- (세외수입) 과태료·범칙금 등 자치경찰 분야 세외수입 시도 이관

#### ③ 궁극적 국가경찰-자치경찰 이원화

#### ○ 국가경찰과 독립된 자치경찰 조직 운영(이원화)

- (1안) 수사·정보 담당 부서 제외 모든 기능의 조직·인력을 위원회로 이관
- (2안) 생안, 여청, 교통 부서 조직·인력(지구대·파출소 포함)을 위원회로 이관  
※ (단계적 도입) 우선 세종·제주부터 자치분권위원회 「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」  
(‘18. 10.) 적용하여 이원화 시범 도입 → 전 시·도로 확대

#### ○ 자치경찰제 규정 사항 「경찰법」에서 분리, 「자치경찰법」 제정 검토

#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 건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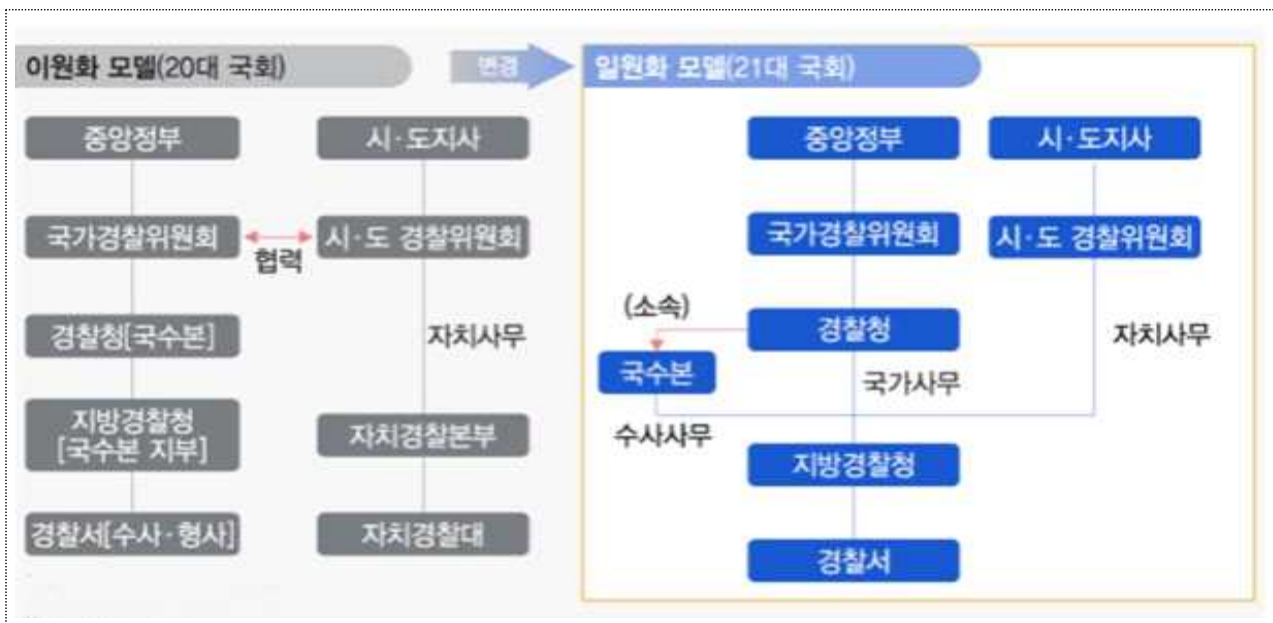
## 1 추진경과

### 1 자치경찰제 도입경과

-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: 2017. 7.  

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, 법제처, 경찰청 등과 협의,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
- 20대 국회,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발의(대표발의 :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) : 2019. 3.
  - 지역 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
  - ※ 공수처 신설 등 여야 대립으로 논의 불발,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(2020. 5.)
- 광역단위 일원화 방식의 자치경찰 운영방안 발표 : 2020. 7.
 

- 자치경찰신설 비용 과다 문제 및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
  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 감안
- 21대 국회, 자치경찰 일원화 모형 발의(대표발의 :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) : 2020. 8.
  - 국가경찰 중심의 기존의 경찰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채 경찰사무만 국가사무, 자치사무, 수사사무로 구분
-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개정 「경찰법」\* 국회 통과 : 2020. 12.  
 \*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2021. 1. 1. 시행)
-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: 2021. 7. 1.
  -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형과 일원화 모형의 비교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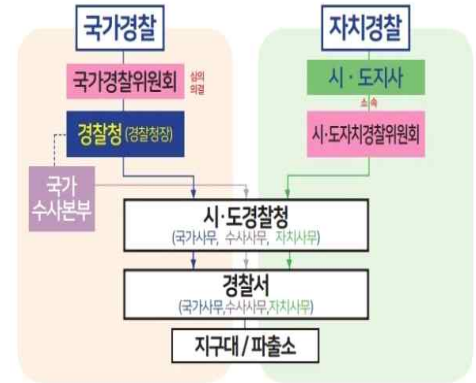
## 2 현황 및 한계

### 1 운영개요

- (일원적 자치경찰제)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조직을 국가경찰 중심으로 일원화  
모든 경찰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①국가경찰 사무와 ②자치경찰 사무,  
③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

-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하고, 그 사무에 따라 지휘·감독의 주체를 달리하는 모델

-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, 교통, 여성·아동·노약자,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·감독을, 자치경찰 이외 국가사무는 경찰청장,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·감독을 받고 있음



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

구 분	내 용
조 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방경찰청을 시·도경찰청으로 변경 ⇒ 시·도경찰청은 '반국가·반지방조직'으로 변화 의미</li> <li>▶ 기존의 시·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·운영(일원화)</li> <li>▶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</li> </ul>
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성격)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체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</li> <li>▶ (구성) 7명의 위원을 시·도지사가 임명, 3년 임기, 연임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천 6명 (시·도의회 2, 국가경찰위원회 1, 시·도 교육감 1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2)</li> <li>- 시·도지사가 지명 1명</li> </ul> </li> <li>▶ (권한)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·도경찰청장 지휘·감독</li> </ul>
신 분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찰공무원 신분은 국가직 유지</li> <li>▶ 경찰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·파견·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(신규채용, 면직 제외)을 위임</li> <li>▶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·도지사는 경감·경위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</li> <li>▶ 승진 시,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규정</li> </ul>
예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시·도지사가 수립</li> <li>▶ 국가는 인력,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</li> </ul>
상 호 관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가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 시·도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·명령 가능</li> </ul>

## ② 운영성과

### ○ (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의 도입)

부 산	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관광단지(기장 오시리아) 교통수요 분석 안전대책 수립 /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 치안대책 수립
전 남	고령화 및 1인가구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'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대책' 수립(보이스피싱·농산물절도피해회복, 치매노인보호 고독사방지 등)
제 주	관광지 특성에 맞춰 '휴가철 종합치안 활동 대책' 추진 → △성범죄 예방(숙박시설 몰카점검 등) △렌터카 등 교통사고 예방(주야간 음주운전 단속, 공·항만홍보 강화)

### ○ (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)

세 종	'지역경찰장(지구대장·파출소장)' 보직 인사 시 주민 의견 반영 → 경찰 인사행정에 최초 주민의사 반영
대 구	'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회' 구성 → 지역시민그룹·자원봉사그룹·아동그룹·청소년그룹이 스스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해결
충 북	도민과 소통하는 '자치경찰 치안협의체' 운영, 지방의회·학계·언론계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입안·시행·환류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

### ○ (기타) 코로나19 대응 유기적 협력, 어린이 안전 강화, 치안 사각지대 보호 정책 발굴 등

## ③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

### ○ (자치경찰사무 법적 성격 모호)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 불명확

### ○ (실질적 인사 권한 미비)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

구분할 뿐,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대로 유지되기에 권한 분산의 한계 有

- 승진 심사 및 징계 심의 권한 미비(승진심사위 및 징계위 경찰청 존치)로 형식적 임용권 행사
- 핵심적 치안 인력인 지구대·파출소 공무원의 임용권 대상 제외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운영 애로

### ○ (안정적 재원 부재)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시책 발굴을 위한 예산소요는

지속 증대하나,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이양 사무로 분류되어 '23년 이후 전액 시·도비로 운영 예정 →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

### ○ (일원화 제도의 근본적 한계) 자치경찰 조직에 대한 총괄적 통솔권이 아닌

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·감독만을 부여함에 따라 일선 경찰관 및 시도 경찰청장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음

- 자치경찰관은 없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만 있기에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보가 곤란함. 자치경찰관으로 특정되지 않는 국가경찰 소속인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에게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움<sup>1)</sup>
- 개정 경찰법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소관은 경찰청 단독이며, 이 법률의 개정 등에 자치분권위원회 또는 각 시도의 입장 반영 애로

1) 경남형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(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.3월)

## 2 건의과제

추진  
방향

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

주요  
과제

### ①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

「지방자치법」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 명시

- ①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 지위·역할 재정립

### ②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

#### 인사권 실질화

- ① 임용권 범위 확대(지구대·파출소)
-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

#### 안정적 재원 확보

- ① 자치경찰교부세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
- ② 과태료·범칙금 사·도 이관

### ③ 국가경찰 - 자치경찰 이원화

자치경찰 조직·인력 자치경찰위원회 이관

- ① 자치경찰조직 신설(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·이원화)
- ②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
- ③ 「경찰법」 소관 부처 변경(경찰청 → 행안부·경찰청 공동 소관)

### 3 세부내용

#### 1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

##### ○ 「지방자치법」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 명시

-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개정
- 자치경찰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논란 해소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·역할 재정립 →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

#### 2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

##### 1 인사권 실질화

##### ○ 자치경찰 승진 T/O를 별도 확보 및 경정·총경 승진 추천권 부여

- 시도별 승진 T/O 배정 시 자치경찰 승진 T/O 분리하여 위원회에 별도 배정
- ‘경감→경정’, ‘경정→총경’ 승진 시 추천권을 위원회에 부여  
(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22조 개정)

##### ○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

-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7조 및 「경찰공무원 징계령」 제3조 개정

##### ○ 지구대·파출소의 자치경찰부 이관 및 임용권 대상 포함

-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34조 및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4조 개정

##### ○ 자치경찰부 조직·정원 및 사무조정 시 위원회와 사전 협의 조항 반영

-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»,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», 「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」 개정  
※ 경찰법 제24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직 업무 추가
- 자치경찰부장 임용 시 위원회와 협의·추천하도록 하거나 개방직 임용



## ② 안정적 재원 확보

- (자치경찰특별회계)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운영
- (재원확보 방안) ①자치경찰교부세 ②과태료, 범칙금 등 시·도 이관
  - (자치경찰교부세) 주세(연간 약 3조원)의 약 5~10%를 세입으로 하는 방안 검토\*  
\*2022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안전위원회 부대의견
  - (과태료, 범칙금\* 등) 「국고금 관리법」 개정 또는 특별법\*\* 제정  
\* '20년 기준 총 약 8,552억원(과태료 7,739억원, 범칙금 813억원) 수준임  
\*\*(사례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: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과태료·범칙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계상

---

### ③ 국가경찰 - 자치경찰 이원화

---

#### ① 자치경찰 조직·인력의 자치경찰위원회 이관

- 자치경찰 조직 신설(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·이원화)
  - ⇒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(담당 경찰공무원) 직접 관장 및 지휘·감독
  - (1안) 시·도경찰청의 수사사무(국가수사본부 지휘) 부서, 정보 업무 수행부서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조직·인력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
  - (2안) 시·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(생활안전, 여성·청소년, 교통·경비) 조직·인력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이관(지구대·파출소 포함)
-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
  -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은 지방 특정직으로 전환하되, 지방재정부담과 신분변동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국가직 유지 → 단계적으로 전환
  -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관인력 및 신규채용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교육·훈련을 담당
- 경찰청 소관 (舊)경찰법\*을 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규정 및 별도 제정
  - \* 각 시·도(위원회) 입장 반영 가능한 행안부,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법령 제·개정 관여 가능성 희박
  - (단기검토) 법령 소관부처 변경(경찰청 → 행안부·경찰청 공동 소관)
  - (궁극적) 경찰법에서 분리, 제도 이원화 기반의 「자치경찰법」 신설
- 단계적 이원화 추진(우선, 세종·제주 등 시범 도입 → 전 시·도 확대)